



서길원 大記者

### 세상읽기

## “의사들의 승인과 허락이 필요한가”

의사정원이 더 늘어나야, 그리고 의대가 더 생겨야 국민들이 제 때 치료를 받고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데도 그들은 '절대 불가'다. '목숨 걸고 반대'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의사가 많이 생기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의사들, 참 대단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에 대해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어서다.

의사정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의사들의 의견은 정부가 참고하면 될 일이지 그들의 승인

이나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은 여야나 보수와 진보로 나뉜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의료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의대 정원확대와 의대신설은 의사들의 승인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의사정원이 더 늘어나야, 그리고 의대가 더 생겨야 국민들이 제 때 치료를 받고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데도 그들은 '절대 불가'다. '목숨 걸고 반대'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이다. "의사가 많이 생기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산촌의 의료원에서 연봉 3억원을 준대도 지원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 서 안타까운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데도 의사들은 의사가 많으면 안 된다고 한다.

'문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소명이라고 한다. 의사로서의 소명을 위해 윤리적 지탄을 받은 범죄를 저질러도 한 번 판 의사면허의 박탈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저질러 모두가 자리를 잃고 직장에서 겨나도 의사만은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위해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탓에 서울이고 지방이고 간에

'의대 초등반'이라는 학원까지 생겨 '맛집 줄 서듯 한다'고 한다. 일 단 의대만 가면, 일단 의사만 되면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으니 초등학교때부터 미·적분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탄식으로 바뀐다.

국민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실소를 금치 못해 웃다가도 그들의 무소불위와도 같은 막강한 카르텔 앞에서 또 절망한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신설을 놓고 삼바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정부가 밀려도 한참 밀린다.

'삼바 싸움'이라는 용어자체도 웃기는 일이다. 정부가 직능단체와 정책입안을 두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중 소신의 정치로 친다면 최고 일성인듯 싶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를 앞에서는 음착잡착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의사들이 때를 지어 흰 가운과 청진기를 내어 던지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채 두 주먹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은 막고 싶은 것이 정부의 마음일 게다.

문재인 정부를 그런 식으로 무릎 꿇린 그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 의사들한테 혼쭐이 났다. '없었던 것'으로 겨우 달래고 달래서 그들이 다시 청진기를 들게 했지만 생명의 존엄을 다루는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운 의사들의 집단행동 앞에 정부는 무력하기만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의료정책을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 정부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끌려다니면 국민이 끌려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참조해야 할 필요는 있었지만 국민의 입장

에서 하루하루도 속히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사가 없어 국민이 죽어가는 현실은 이제 끝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을 직능단체인 의협하고 협의하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익단체와 다를 바 없는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국민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막에서 수영하기'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이 삶의 질과 직결된 의료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려면 전문가든 물론 시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도 수입이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여타 다른 직군보다 많은 수익은 여전히 보장될 테니 국민의 입장에서 동업자인 의사 수 늘리고, 의대 신설하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

#### 교통안전, 도로 위 노면표시 활용하자



최관중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는 의미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신호등이 별도로 없더라도 이 표시를 본다면 꼭 속도를 줄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그재그 차선은 서행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많이 표기되어 있어 주행 시 보행자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속이 채워진 삼각형 노면표시는 전방에 오르막길이나 과속방지턱이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속이 비어 있는 역삼각형 표시는 차선이 줄어들어 서로 양보가 필요할 때 나오는 표시이므로 합류 시 도로의 진행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 후 진행하면 된다.

이처럼 도로 위 노면표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운행한다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표지판이나 신호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 위 노면표시이다.

노면표시에는 직진이나 좌회전같이 직관적인 표시도 존재하지만, 마름모나 역삼각형 등 언뜻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표시도 있다.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전방 30m~50m에 횡단보도가 나타난다

#### 공사장 화기작업 중 주의할 점



박수현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대부분이어서 안전보다는 물량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폐해가 매년 반복된다. 그러면 화기작업 중 화재발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방화포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 화재를 예방하자. 그냥 본보기로 설치하는 게 아닌 화기감시자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해 주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화재발생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자. 공사장에서는 용접·용단·절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다양한 작업이 수시로 이뤄진다.

이때 발생한 불꽃이 적재해둔 공사장의 기자재로 착화되거나 다른 작업 중 발생하는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과 만나게 된다면 이는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화기작업 시에는 주변에 가연물이

있지는 않는지,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을 비치 후 작업을 시작하자.

또한 화기작업시에는 작업구간별로 화기감시자를 지정하여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화재발생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화재를 예방·대응하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이 있다.

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자.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nmae.co.kr

발행·편집인 고계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취재본부(062) 943-0140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 ▶ E-mail : [honamnews@hanmail.net](mailto:honamnews@hanmail.net) [honammail@naver.com](mailto:honammail@naver.com)

<b>지국안내</b>	상무.....381-5310	오치.....261-9461	<b>지사안내</b>	화순...010-2430-5055	여수...010-8587-2288
총장.....223-4123	서부.....651-0004	문흥.....261-9462	영광...010-9860-5489	함평...010-3095-5842	
무등.....224-4188	송암.....362-4102	일곡.....573-3200	완도...010-5066-4708	영암...010-4604-3742	
동부.....234-4235	농성.....362-4102	동문.....525-8994	장흥...010-5665-8354	진도...010-8525-4567	
화동.....225-0651	진월.....671-7276	두암.....266-1920	담양...010-3602-3550	해남...010-3471-6542	
광천.....374-2120	봉선.....675-5530	침단...971-1920	곡성...010-2632-4504	광산...010-7613-4320	
화정.....374-3713	중양.....521-5640	신창...955-0451	구례...010-8597-0053		
금호.....376-7153	중흥...433-1503	월곡...941-9174	보성...010-3626-4776		
쌍촌.....371-9584	양산...574-3745	송정리...010-5524-3638			
	운암...521-4270				